‘4대강 녹조’ 충돌

승촌보 녹조 폭염이 계속된 11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 앞 영산강에 녹조 띠가 퍼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경부

녹조현상 부각 두려워 공무원들 동원해 제거 무리한 댐방류도 추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배치된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MB정부 당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MB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洑)가 녹조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녹조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진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위적 녹조 제거 작업에 대해 ‘일상적인 하천 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하천 관리 차원에서 지방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은 사실이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녹조제거는 당연한 조치 MB 4대강 사업 폐해 은폐 위한 조치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부유쓰레기)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환경부와 취수장 관리자,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실제 걷어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유 쓰레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녹조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양 부처가 지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미 2011년부터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 협의체가 있었고 이를 정부 각 부처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 평가와 정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수원 수질 위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종적으로는 보 철거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4대강 洑와 녹조 현상 관련 개연성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녹조, 근본 원인 찾아 처방해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낙동강 중·하류 수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 녹조의 원인 제거를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하나.

▲보 철거 문제는 먼저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다. 조사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보다 기대 이익이 큰지 작은지를 봐서 (보 철거를) 결정할 것이다.

-보 철거 외에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일요일에 답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다. 올해는 녹조가 작년 피크 때의 9분의1 수준 내외다.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도리다. 다만 수돗물은 예방적·사후적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녹조와 보 건설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차원인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조류나 녹조류는 비료성분인 인, 수온, 일사량, 유속 등 4가지가 결정적인 인자라는 것은 정립된 이론이다. 다른 3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유속이 떨어지고 정체되면서 녹조가 더 생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높은 수온 등 녹조 발생 조건은 매년 있는데 유속이 느려진건가.

▲유속이 느려진 것은 고정변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생겼다 안생겼다 한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 현재까지 축적한 과학기술로는 정확히 구현하지 못한다.

-녹조 발생에 여러 요인이 있다는 건데.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전에는 조류 조사를 안 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 될 정도로 생기지 않았다는 정도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걸 정기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유속이 빨라지면 조류가 덜 생긴다는 것은 확실하다. /연합뉴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알림=작가 휴가로 광일만평·만화 16일까지 쉽니다.

檢 칼날앞의 전두환

全씨 재산 본격수사 초읽기 … 이번주 일가 소환 통보할 듯

전두환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처남 이창석

환수팀 명칭 ‘특별수사팀’으로 변경 … 수사·집행 ‘투트랙’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조만간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기소 및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르면 이번주 전씨 일가에 대한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처남 이창석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사 전환과 동시에 환수팀의 명칭은 특별수사팀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약 석달,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 약 한달 만이다.

본격 수사로의 전환은 검찰이 그동안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한편으로 전씨 측의 자발적 협조를 촉구하던 ‘신중 모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적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전씨 측의 불법재산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환수팀은 추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은 전씨 일가의 금융 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크게 4갈래로 분류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불법 정황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격 수사에 대비한 ‘사전 포석’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지만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해 온 ‘특수통’ 김양수 부부장을 이번주 환수팀에 투입하고 회계 분석에 정통한 수사관 2명도 배치했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국·재용씨와 이창석씨의 경우 사업체 설립과 경영,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유령회사를 통해 전씨의 은닉 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재국씨가 블루아도니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재국씨 소유의 출판그룹 시공사와 관련해서도 설립 자금이나 운영비, 회사 소유 미술품의 구입자금 등을 둘러싸고 탈세, 횡령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재용씨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창석씨는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조만간 전씨 일가에 대해 기소 및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